

우즈베키스탄 국별지원전략 및 지원사업 종합평가

한국국제협력단¹⁾

목차

- I. 평가 개요
- II. 우즈베키스탄의 개발 환경과 원조 여건
- III. 우즈베키스탄 국별지원전략(CAS)의 수립 및 시행 평가
- IV. 여타 원조공여자와의 비교, 국제개발원조 목표와의 부응 여부
- V. 형태별 원조사업에 대한 평가
- VI. 결론 및 건의

I. 평가 개요

우즈베키스탄은 우리나라의 중점 협력대상 국가의 하나로, 1992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억 7,585만 달러의 무상원조가 제공된 국가이다. 21세기 들어 우즈베키스탄은 동구 및 CIS 지역 국가들 가운데 우리나라의 지원 순위 1위인 국가로 자리매김 하게 되었다. 금년에도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원조 규모는 1,222만 달러 수준으로, 국가별 지원 순위에서 4위를 차지하였다. 최근 수년 사이에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원조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여, 2001년 이래 對우즈베키스탄 무상원조 규모는 무려 5배 이상 늘었다.

이러한 시점에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원조사업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일이라 할 수 있다. 특정국에 대한 원조사업이 확대되면 될수록 이에 대한 효과를 점검할 필요성이 커지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비단 원조와 관련된 전략과 세부 내용뿐 아니라, 원조사업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여지는 없는지 그 진행과정에 대해서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개발협력 분야에서 우즈베키스탄과의 관계는 앞으로 더욱 증진될 전망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1) KOICA 사업평가실 평가과제로 산업연구원에서 수행함.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국가지원전략(Country Assistance Strategy : CAS)은 우선적인 평가대상이다. CAS의 주요 내용과 지원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수립된 전략의 타당성과 그 유효성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앞으로의 전략 수립과 이와 관련되는 정책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개별 지원사업 하나하나에 대해서도 그 타당성과 효과성, 파급효과 등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미래 사업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전자가 국가별로 전개된 원조사업에 대한 거시적 평가라고 한다면, 후자는 미시적 평가라 할 수 있다.

본 보고서의 평가 작업은 먼저 평가 매트릭스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본적인 문헌조사 및 통계조사, 현지 방문을 통한 사업현장 조사, 반구조화된 인터뷰, 설문조사 등을 병행하면서 이루어졌다. 개별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2010년 9월 현재 종료평가까지 완료된 사업을 주된 대상으로 하였으며, 적합성, 효율성, 효과성, 영향력, 지속가능성 등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였다. 그리고 2010년 9월 현재 추진 중이거나 종료 단계에 있는 미완료 과제에 대해서는 일단 적합성, 효율성 등의 평가기준만을 적용하여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번 평가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발주로 산업연구원이 구성한 평가팀에 의하여 2010년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에 걸쳐 이루어졌다. 평가에는 책임연구원인 심영섭 선임연구위원을 비롯하여 총 5명의 인력이 투입되었다.

평가책임자 : 심영섭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 : 주동주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김학기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안옥윤 (산업연구원 전문위원)

김석환 (주성대학교 부총장 겸 국제개발전략연구소장)

II. 우즈베키스탄의 개발 환경과 원조 여건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원조 환경은 양호한 편이다. 수원국의 정치경제가 대내외 환경 변화로 인해 우여곡절을 겪긴 했지만, 비교적 안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우선 그러하다. 경제적으로는 글로벌 금융 위기로 어느 정도 타격을 입긴 하였어도, 최근 우즈베키스탄의 경제상황은 상당히 호전되고 있고, 성장세도 견실해지고 있다. 자원 분야를 중심으로 외국인직접투자가 늘어나면서 재정적자가 축소되고 경상수지 흑자기조가 유지되고 있고, 이로 인해 경제의 성장기반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옛 소련시절부터 이어져 온 국가의 사회보장정책이 기본적으로 작동하는 데다, 독립 이후의 일시적 혼란과 경제침체는 정치 안정 및 국가질서 확립 등으로 인해 회복세를 타고 있다.

대외원조에 대한 인식도 비교적 건전한 편이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외국의 원조를 국가개발정책과 철저히 연계(aid alignment)하고 있으며 내각이 수원 우선분야 및 수원 사업목록 등을 국가 개발 정책과 연계해 왔다. 대외원조로 진행되는 모든 사업들은 국가개발 정책에 부합하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되기 때문에 상호 연계성이 우수하다. 또한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원조 사업별로 특별법에 해당하는 내각령이나 대통령령을 제정하고, 운영재원 부담 및 각 정부부처가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할 사항을 법제화하여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하고 있다. 이 덕분에 수원국의 주인의식(ownership) 또한 매우 우수한 편이다.

우리나라의 對 우즈베키스탄 무상원조가 최근 크게 늘어난 것은 수원국의 흡수 능력과 개발 환경이 양호했던 데에도 어느 정도 기인한다. 다만 2005년 5월 안디잔 사태 이후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외국의 NGO 활동을 금지하고, 외국 원조에 대해서도 과거에 비해 배타적이고 선별적인 입장을 펴 온 점은 특기할 만하다. 이러한 정책 선회는 우즈베키스탄의 지정학적, 국제정치적 중요성에 의해 자원을 중심으로 외국인투자가 크게 늘고 있는 데에서 상당부분 기인하고 있다.

Ⅲ. 우즈베키스탄 국별지원전략(CAS)의 수립 및 시행 평가

2007년 7월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수립한 ‘공적개발원조(ODA) 중기 전략(2008-2010)’에 입각하여, 그리고 KOICA의 ‘대외무상원조 중기 전략’의 일환으로 ‘우즈베키스탄 국별지원전략(Uzbekistan Country Assistance Strategy) 2008~2010’이 작성되었다. 전략적 원조 제공이 필요한 국가를 대상으로 ‘국별지원전략’(CAS)을 수립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하기로 한 방침에 따른 것이다. CAS가 수립되기 이전에는 對 우즈베키스탄 지원사업이 외교적 목표, 연도별 무상·기술협력사업 계획 등에 따라 산발적으로 추진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여기에서 특기할만한 점은 중기 원조전략의 세부 추진 방향 중의 하나인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우즈베키스탄이 우리나라의 무상원조 사업의 중점지원국의 하나로 지정되었다는 점이다.

2007년에 수립된 ‘우즈베키스탄 국별지원전략’은 때마침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원조 규모가 크게 늘어나는 시점이자 우리나라의 DAC 가입을 앞둔 시점에 작성된 것으로, 원조의 전략적수행을 시작했다는 측면에서 매우 시의적절한 작업이었다고 평가된다. ‘국별지원전략’은 체계적인 원조사업의 실시를 위한 기본 틀을 마련했다는 점뿐만 아니라, 원조를 통한 국가지원전략의 전반적인 체계가 구축되었음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별로 체계적인 원조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별지원전략’을 작성하기

는 하였으나, 초기단계에는 시행착오를 겪기 마련이다. 원조전략의 목표가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분야별 세부 전략을 제시할 수 없었다든지, 전략 이행에 관한 구체적 프로그램이나 전략 달성을 위한 절차, 프로그램 수행자, 전략 수행에 관한 평가, 전략 작성의 주체에 관한 규정 등이 없거나 불분명한 점 등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과제들이다. CAS에서는 프로그램 사업 발굴 및 기획 단계부터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 방안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비용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아직은 제대로 실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는다.

무상원조 사업이 유상원조 사업과 별개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될 만한 사항이다.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공관 내 관계기관 대책회의 등에서 유·무상 원조 사업이 각자 별개 사업으로 진행되고만 이루어지고 있고, 사업간 협력관계 모색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물론 무상원조사업과 유상원조사업은 그 특성상 사업진행 방식 등이 달라서 특정 사업을 중심으로 협조관계를 구축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사업환경 분석, 기업들의 참여증진, 전문가 및 봉사단 파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가능한 영역이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우즈베키스탄 국별지원전략’은 2007년에 작성된 이후로 아직 수정되거나 보완된 적이 없다. 따라서 이번 평가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향후 작성될 CAS에 충실하게 반영되어 보다 전략적이고 보다 체계적인 원조사업이 운영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IV. 여타 원조공여자와의 비교, 국제개발원조 목표와의 부응 여부

우즈베키스탄은 많은 원조공여자들로부터 지원을 받는 나라다. 그런 만큼 원조공여자들 - 원조공여국가들뿐 아니라, 국제원조기구들 - 간에는 對 우즈베키스탄 지원 전략에 있어서 차별성, 나름대로 정체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차별성이 때로는 국제분업의 바람직한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경합적인 경우도 없지 않다. 따라서 자칫 원조 규모의 다과와 상관없이 원조공여자의 정체성이 희박해지는 경우도 있다.

원조공여자의 차별성과 정체성은 원조전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체로 원조공여자들의 對 우즈베키스탄 지원 상황을 비교해보면, 각 공여국과 다자기구들은 우선적으로 모두 자신들이 가장 비교우위가 있는 분야에 원조를 선택해서 집중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면 미국의 경우는 농업 분야 외에 민주주의 보급 등의 제도개선 분야에 치중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아프가니스탄에서 활동하는 자국 군대의 보급기지로 활용하고 있는 면이 없지 않다. 한편 일본은 실크로드 외교 정책의 일환으로 유상원조와 결합해 자원과 에너지, 인프라 등에 집중하는 자신들의 고유한 원조 정책을 우즈베키스탄에서도 그대로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나라의 원조전략도 비교우위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2007년에 CAS를 설계할 당시, 우즈베키스탄의 개발정책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사업으로 5개 분야를 선정하였는데, 그 중 교육, 보건의료, 정보통신 등 3개 분야를 중점지원 분야로, 행정제도 개선은 계속 지원분야로, 산업·에너지는 신규 지원분야로 설정하였다. 물론 그 이후에 구체화되어 실행된 프로젝트들은 설정된 목표에 비교적 충실하였고, 그 성과도 괄목하였다고 평가된다. 개발경험을 나누면서 경제사회 제도 개선에 이바지하고, IT/정보화의 선진국으로서 정보화 초기 사회인 우즈베키스탄의 발전을 견인하는 한편, 인도적 측면에서 지원이 가능한 보건의료분야에서 다양한 원조사업을 비교적 성공적으로 진행해 왔다.

우리나라가 관심을 갖고 지원하는 사업들은 당면 현안을 해결하는 과제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동태적으로 역동적이고 장기 발전을 견인하는 분야에 더 역점을 두는 인상이다. 물론 우리나라의 이러한 원조활동은 새천년개발목표(MDGs)의 달성, 원조효과 제고를 위한 파리선언(PD) 및 아크라행동계획(AAA)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제개발 목표와 발을 맞추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있어서 이를 실현하는 과정에의 참여와 기여는 다소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빈곤감축 및 사회개발의 촉진에 중점을 두고 있는 새천년개발 목표의 추구에 있어서는 8개의 주요 목표 중 일부에 대해서만 직접적이고 가시적인 기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무상원조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파리선언 및 아크라행동계획의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원조전략은 수원국의 미래비전을 현재보다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데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평가받을 만하다.

V. 형태별 원조사업에 대한 평가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KOICA의 무상원조 사업은 그 효과가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수원국의 입장에서 정부당국자나 수혜자들 모두 높은 만족감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비록 개별 프로젝트의 규모가 크지 않고, 지원 분야도 제한되어 있기는 하지만, 한결같이 목표했던 사업 효과를 충분히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평가대상인 11개의 프로젝트 사업과 해외봉사단 파견, 국내초청연수 등은 모두가 소기의 사업성과를 시현한 것으로 평가된다.

사업의 적합성 측면에서 대부분의 프로젝트 사업이 CAS에서 설정한 지원목표 및 ‘중점지원분야’에 부합하였다. 또한 우즈베키스탄에서 2007년에 설정한 후생개선전략(WIS)의 목표에 부합하고, MDGs와의 연관성 측면에서도 사업수행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해외봉사단 및 초청연수사업도 CAS에서 선정한 지원분야에 대부분 부합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최근 CAS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분야에 대한 지원도 점차 늘어나고 있어, 향후 CAS를 수립할 때 보다 정교한 전략의 설정이 요구된다.

효율성의 측면에서 볼 때, 프로젝트 사업들은 대부분 성과기대가 높고 공헌도도 비교적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해외봉사단에 대한 현지 평가도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다. 초청연수사업은 대부분의 연수자가 만족하고 있어 사업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되었다. 연수형태별로 볼 때 국별 연수가 연수효과를 가장 많이 보는 사업으로 평가되므로, 향후 확대하여 추진함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효율성 측면에서도 대체로 긍정적이다.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무상원조 사업은 단위 프로젝트 형태로 진행되어 분절화·파편화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음에도, 투입대비 산출 성과, 즉 효율성 측면에서도 그 성과가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되었다. 프로젝트 사업들은 대부분 전체 투입 비용이 당초 예산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고, 현지의 만족도도 비교적 높았지만, 일부 사업들의 경우 계획보다 사업완료가 지연된 사례가 종종 발생하기도 하였다. 주로 우즈베키스탄 측이 그 원인을 제공하였지만, 앞으로 사전 기획 단계에서부터 우즈베키스탄 측의 행정협조 관계 등 지연이 반복되는 원인을 파악하여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모든 원조사업은 양국 간의 관계 개선 및 우리나라의 국가 이미지 향상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프로젝트 사업들은 완료 후 상당한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 영향력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완료사업인 ‘세계경제외교대 도서관 정보화사업’, ‘한-우즈베키스탄 IT 훈련원 건립사업’ 등은 타 기관의 모델사업으로 파급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고,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의 경우에도 ‘3개 중앙사료보관소 정보화사업’처럼 CIS 국가들 포럼에서 모델사업으로 발표되는 등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다. 주로 IT/정보화 분야를 중심으로 성과가 뛰어난 일부 사업의 경우 향후 유사한 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갈 시범사업으로도 발전해 나갈 여지가 얼마든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밖에 해외봉사단 사업이나 초청연수사업 역시 전반적으로 우즈베키스탄의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양국 간 우호증진의 구축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VI. 결론 및 건의

우리나라와 우즈베키스탄은 이미 형성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더욱 심화된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갈 전망이다. 우즈베키스탄의 잠재력과 지정학적 중요성은 향후 원조전략을 수립하고 설계하는 데에 결정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의 원조정책을 좀 더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07년에 마련된 ‘우즈베키스탄 국별지원전략 2008~2010’이 비교적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전략의 수립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 될 것이다. 앞으로 제시될 ‘우즈베키스탄 국별지원전략’에서는 세부적인 미비사항을 보완하는 데에

그치지 말고, 한 차원 높은 성숙한 원조정책을 구사하는 데에 중점을 두는 것이 더 바람직해 보인다. 이러한 차원에서 다음 몇 가지를 제언하고자 한다.

실질적인 통합국가지원전략의 마련 - 개발원조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가지원전략을 골간으로 하는 원조 프로세스의 정립이 필요하다. 2010년 1월에 제정된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기본원칙에 따라 새로운 국별지원전략이 수립될 전망인데, 여기에서는 무·유상 등의 지원 요소를 모두 아우르는 방향으로 개발협력이 이루어지고, 또 그에 따른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야만 한다.

국별/지역별 ‘CAS자문협의회’ 운영 - 효과적인 통합국가지원전략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수원국 현지에 대한 깊은 이해가 전제되어야 하는 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별(우즈베키스탄) 또는 지역별(CIS 또는 중앙아시아 지역)로 자문과 조언을 얻기 위한 협의체를 운영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협의체를 통해 CAS의 작성에 현지 전문가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개별 프로젝트와 상위 전략과의 연계성 강화 - 개별 프로젝트의 성과를 독립적인 단위로 평가할 때에는 비교적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전략과 일관성의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다양한 평가가 가능하다. 따라서 개발협력 프로젝트의 실행에 있어 선택과 집종의 개념과 원칙이 단순히 개별 사업 수준에 그칠 것이 아니라, 상위 개념의 전략, 즉 국별/지역별 CAS의 설계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원조공여국으로서의 한국의 독특한 위치 설정(positioning) - CAS를 설계할 때에는 원조규모의 한계를 고려하여, 규모와 관계없이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원조공여국으로서 한국의 독특한 위치 설정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가 단위에서나, 개별 프로젝트 단위에서 원조규모가 적다고 해서 이의 기대성과 규모에 비례해서 일률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따라서 협소한 의미에서의 국익 확보보다는 전략적으로 원조공여국으로서의 한국의 독특한 위치권력(positional power)을 확보하는 데에 주력하자는 것이다.

미래희망을 견인하는 국가로의 자리매김 - 단순한 과거 경험의 공유가 아니라, 과거의 성공적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자 노력함으로써 차별화된 한국형 원조모델을 모색하고 글로벌 원조규범과 관행에 새로운 전형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수원국의 경제·사회적 미래비전을 구현하는데 결정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 수원국의 비전설정 단계부터 함께 참여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기도 한다. 이것은 개발협력의 개념을 단순히 빈곤퇴치가 아니라 미래 희망과 비전을 공유하는 데까지 확대할 때 가능한 일이며, 수원국에서 공여국이 된 유일한 국가, 한국만이 실천할 수 있는 일 이기도 하다.

Flagship 프로그램의 발굴 - 이러한 시도는 ODA의 글로벌 트렌드를 반영함과 동시에 차별화를 시도하는 의미에서 Flagship 프로그램의 발굴로 이어질 수 있다. 국제적으로 원조사업이 경쟁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한국의 국격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큰 사업을 중심으로 Korea Brand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원조 영역의 확대도 중요하지만, 만족도, 파급효과, 수원국 정부의 관심도 등을 고려하여, 한국을 각인시킬 수 있도록 개발협력의 Korea Brand를 개발하는 일도 필요하다.

미래지향적으로 한국형 개발협력 모델을 모색하는 또 다른 이유 - 굳이 한국형 개발협력 모델을 모색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2차 대전 이후 선진국들의 원조수혜를 받은 나라 가운데 유독 한국만이 원조공여국으로 전환하였다는 반성에서 비롯된다. 이제까지의 경험과 성과로 미루어 볼 때, 선진국이 중심이 되어 마련한 전형적인 원조규범에만 따르면 지속가능한(sustainable) 성장을 담보하기보다는 저개발과 빈곤 상태에 있는 현상을 지탱가능한(supportable) 수준으로 유지시키는 데에 그치는 경우가 태반이었으며, 한국은 단지 예외적인 사례였을 뿐이다. 따라서 한국형 원조모델을 새로 제시한다고 해서 크게 비난받을 일은 아니다. 오히려 원조공여국으로서의 한국이 원조규모를 점차 확대해 나가는 과정에서 과거의 경제개발과 현재진행형인 사회발전의 성공경험을 바탕으로 독특한 위치권력을 확보하는 것은 오늘날 수원국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을 앞장서서 모색하는 데에 기여하는 과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성과중심 관리(results based management)에 대한 재고 - 무상원조가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바를 보다 더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서는 사업에 투입되는 자원과 그로 인해 직접 산출되는 성과를 위주로 하는 사업이행중심 관리(implementation focused management) 시스템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 대신에 본 보고서에서는 사업의 결과물(outcomes)과 영향력(impact)을 중장기적으로 관리하고 측정하는 성과중심 관리시스템으로 전환해 나가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성과중심 관리는 특히 오랜 기간 동안 기술 및 조직역량을 갖추기 위해 진행하는 사업이나, 포괄적인 프로그램의 체계 하에서 진행되는 사업,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 비로소 제대로 효과가 드러나는 사업 등의 경우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가 있을 것이다. 또한 단순히 선형적인 투입/산출 성과 위주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목표를 수립하고, 개발협력 성과에 대해 공여국과 수원국이 공동 책임을 지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공동으로 희망과 비전을 갖는 방향으로 사업을 설계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